

전남도,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한층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키로 독립운동사 편찬 등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정책도

전남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전남도는 올해 목표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보훈정책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

책의 초점을 맞췄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고령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전남도 지급분에 시군 참전명예수당까지 더하면, 연령과 지역에 따라 최대 월 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한정됐던 지급 대상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전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보상과 예우에서 소외됐던 대상까지 포함해 보훈 예우의 폭을 확장하



겠다는 구상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부부 합산 연 100만원이던 진료비 지원 한도를 유족과 배우자 각각 연 100만원으로 확대해, 고령 유족의 의료비 부담

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설치된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했던 이용 범위를 배우자까지 넓혀, 제도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수당 인상과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1895년 2차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광복까지 전남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계

적으로 정리한 전남 독립운동사를 2027년 발간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전남 보훈정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보훈의 가치를 역사와 일상 속에서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가 생활 전반에서 이어지도록 정책 보완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구축 포럼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국가 거점 도약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펜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구축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AI 시대 K-반도체 비전’에 발맞춰 광주전남을 시스템반도체 및 후공정(패키징)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 전략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700조원을 투자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포럼은 기초강연과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세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기초강연자로 나서 광주 반도체산업 생태



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공득조 GIST 교수,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교수, 장재형 한국에너지공과대 대학원장이 광주·전남의 차별화된 반도체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호남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공식화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권항엽 “공직자-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특혜 원천차단 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권항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 관계사업자’ 등)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족간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 수단은 미



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의계약상 대방이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 청구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절차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권항엽 의원은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청구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 군수는 지난 9일 “그동안 당에 충실히 소명했지만, 정계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윤리심판원이 상정한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심은 민주당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심이 기각될 경우 강 군수는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 공천 심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민주당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함께 만들자”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시민 1만여명 발길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함께 행정통합 성사도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광주·전남 대통합과 부강한 광주·전남의 비전을 제시했다.

1, 2부로 나눠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는 강 시장의 새로운 저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별도의 공식 식순 없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이 그간 보여준 시정운영과 정책적 행보를 지지하는 시민 1만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축전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도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영상으로 출판을 축하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저의 25년 정치 여정에서 가장 가슴 떨릴 정도의 큰 판”이라며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와 함께 ‘조금 큰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인생에서 가슴 뭉클 판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 선택이 바로 광주·전남 대통합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는 “광주가 민주주의로 역사에 첫 번째 등장을 했다면 이제는 AI,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을 축으로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두 번째 극적인 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영록 도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인 광주·

전남의 엄청난 산업 발전을 약속했다. 강 시장과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시도만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갖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저서에는 12·3비상계엄의 밤, AI중심도시 광주의 탄생과 현재, 대한민국 돌봄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한민국 표준이 된 광주시 혁신정책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온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부강한 도시 광주’로서의 두 번째 등장이 필요하다”며 “12·3비상계엄, 경제위기 등 어떻게 오늘의 위기를 돌파하고,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아이 꿈 키우는 광주 희망장난감도서관 ‘인기’ 전남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문턱 낮춘다

지난해 이용 6108건…가입자 증가세

광주시청 내 자리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육아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명의 부모가 희망장난감도서관에 가입했으며, 총 이용건수는 6108건을 기록했다.

희망장난감도서관 가입자는 2023년 378명, 2024년 463명, 2025년 54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중 75%(410명)는 최초 가입자로, 장난감도서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시청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최장 3주일까지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육아 지원시설이다. 지난 2015년 개소해 운영 10주년을 맞았다. 회원가입 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연

회비는 3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도서관에 상주하며 시설을 관리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기부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한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세 이하 영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장난감에 대한 흥미와 필요가 빠르게 달라지는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발달단계별로 장난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현재 미끄럼틀·트램펄린 등 888개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확충한 장난감은 153개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이던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을 넓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와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법률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권리 구제에 나

서지 못했던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도 보강했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를 비롯해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전 과정을 대리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